



“경쟁 지양, 격차해소 집중 역사·문화 감수성 키울 것”

“교육 선진국 핀란드의 경우 대학 신입생 중 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는 사회인 비율이 40%에 달해요. 우리나라도 ‘내 삶에 도움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때 대학 갈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을 확대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교육 불평등 문제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출신 대학 및 전공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수입 격차가 점차 커지면서 고교 졸업 후 N수를 해서라도 보다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교육이 결국 부의 분배 문제와 직결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고한 대학 서열화를 포함한 대입 제도 문제는 초·중등교육 전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까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격차, 단발성 제도론 해결 안 돼… 공교육 틀에서 맞춤형 지원”

정 교육감의 우려대로 교육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 중 하나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물론, 교육 결과에 따른 부의 지나친 격차도 불평등 문제로 직결된다.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학습격차 해소’를 최대 화두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기회 불평등이나 학습격차는 단발성 조치나 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세대를 거듭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공교육 내에서 격차 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이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서울학습진단성장은 그렇게 출범했다. 센터는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심층진단 및 개별 맞춤 학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서울동구초등학교 내에 꾸려진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강동송파, 남부, 중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학생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 학교 노후 건물 재건축, 국가 정책으로 마련돼야”

정 교육감은 취임 후 5개월을 돌아보며 “생각보다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국회 국정감사 데뷔 전

을 치른 데 이어 취임 후 맞는 첫 학기엔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비 지원 종료 등 교육계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학기를 앞두고 무학여고 화재, 북성초 학교 건물 등급 문제로 인한 개학 연기 등 안전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 교육감은 그때마다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교육감 후보 시절 ‘학교 현장 주 1회 방문’을 공언한 그가 취임 이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금까지 찾아 간 학교는 30여곳에 달한다.

이같은 정 교육감의 ‘찾아가는 행정’은 곧장 정책안으로 실현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서울 시내 1340개 학교 660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급(A~D등급)을 정리하고, 건축 연도별로 40년·50년·60년 등의 기준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건축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생각보다 학내 노후 건물이 많더라”며 학교 건축물도 국가적 수준에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서열화 극복 위해 대입제도 개편 추진 학습진단센터 통해 맞춤형 공교육 지원 강화 노후 학교 재건축 국가 차원 대책으로 마련 역사자료센터 설립 등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 AI 교과서 도입, 효과 검증 후 신중히 적용

그는 “현재는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면 개별로 보수나 재건축 등 땀집식 처방을 하고 있다”라며 “건축물이 재개발 연도에 다다른 학교는 정부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 종합 계획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국가 교육 주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사 소양 갖춰야 편향된 좌우 이념 대립 갈등 풀 수 있어”

정 교육감은 역사사회학자 출신답게 ‘역사 교육’을 강조한다. 정 교육감은 “‘지식’으로의 역사’를 넘어 ‘의식’으로의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학생들이 역사적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 지식은 수업에서 찾지만, 역사 의식과 소양은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키워야 한다는 게 정 교육감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 삼일절 유관순 열사 모교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해 만난 학생들은 유관순 열사를 유관순 선배라고 부

르더라”라며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을 나의 삶과 연관지어 역사 의식을 쌓아간 일례”라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공약으로 내놔던 시교육청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그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아카이브와 같이 온라인 상에 역사교육 자료센터를 구축해 검증된 역사 자료를 탑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교원 및 역사교육 관련 연구자, 교육과정 전문가 등으로 역사교육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소양을 갖춰야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된 좌우 이념 대립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역할하도록 지원”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 이뤄져야 고교학점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쓰일 예정이었지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서울 학교 중 이번 학기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곳은 지난달 21일 집계 기준, 383곳이다. 전체 서울 학교 중 29.4%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이 중 올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연구학교 7개를 지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연구를 실시해 AI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고, 활용 수업 혁신 우수 사례도 공유할 방침이다.

◆“학생 문화적 감수성 키워야…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 시급”

정 교육감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함께 협력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문제를 주도적으로 파악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을 일률적 잣대에 따라 교육 및 평가하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바로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며 “안타깝게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는데,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재정 축소는 정 교육감이 당면한 과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1850억원 세입 확보가 어렵게 됐다. 아울러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 어려움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유아특별회계전입금은 4507억원,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전입금은 2515억에 달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체 세입 재원이 없어 예산규모 축소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교육청의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별 교육 격차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담=김희석 부국장(정책사회부장), 사진=손진영 기자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해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에서 교수로 강단에 서기 시작해 2003년부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대신해